

주한미군의 재배치 및 역할전환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전략

김 재 관*

I. 서론	중국의 인식
II. 주한미군 재배치와 역할전환의 배경과 원인	IV.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역할전환에 대한 중국의 대응전략
III.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역할전환에 대한	IV. 결론

Abstract

China's Response to Relocation and Role Coordination of the U.S. Armed Forces in Korea

This study aims to examine China's understanding of and response to the relocation and role coordination of U.S. armed forces in Korea that effectively began in 2003.

Although for the time being China construes the relocation and role coordination as part and parcel of the United States' aggressive stance against North Korea, China also understands that in the long term this is also a strategy on the part of the United States to restrain China, which has emerged as a prominent strategic rival of the United States in the 21st century. Based on this awareness, China has put forward a series of response strategies.

First, China has opted for a strategy of defensive realism, based on the 'New Security Concept,' which in turn is an alternative strategy to the hegemony and unilateralism of the United States. That is, China plans to not only bide its time and build capabilities, but also to be responsible for its duty in its relations with

other countries. Second is a revision of its foreign policy. Because the theory of 'peaceful rise,' essentially a strategy to emerge as a global great power, can fuel a China threat syndrome and lead to the strengthening of the United States' defense capabilities, China has returned to its 'peace and development' foreign policy line in order to alleviate these fears. Third is the peaceful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rough six-party talks. To more proactively respond to the relocating and role coordination of U.S. armed forces prompted by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China is playing a very active role in the six-party talks. China is trying to raise its status and influence in the process of peacefully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rough six-party talks, which themselves represent a new framework for multilateral security negotiations. Fourth, if the above three responsive strategies are mostly defensive in character, modernization of the

*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연구조교수

defense sector and strengthening of China-Russia relations are more pragmatic responses to the relocating and role coordination of the U.S. armed forces in Korea. Securing power must be the surest guarantee of safety, as relocation of the U.S. armed forces raises security risks in Northeast Asia. Consequently, China is devoting all its efforts to modernization of the defense sector on the

domestic front just as it is doing its best to maintain a peaceful image to the outside world. Defense modernization is also inevitable in order to suppress Taiwan's drive towards independence. As Japan, Korea, and Taiwan are entering a missile defense regime under the leadership of the United States, China has little choice but to modernize its military and build stronger relations with Russia.

Key Words: relocation and role coordination of the U.S. Armed Forces in Korea, trip-wire, The new security concept, defensive realism, peace and development, military modernization, the Six Party Talks

I. 서 론

2003년 이후 주한미군 재조정 작업이 급진전되고 있다. 북핵문제가 여전히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의 발 빠른 주한미군 재편작업은 북한은 물론이고 한국 나아가 주변국가들에게 우려감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북한과 중국은 미국 측의 주한미군 지위조정을 상당히 위협적인 공격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설상가상으로 제2기 부시 행정부가 재집권한 상황에서 이런 우려는 한층 더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한국은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역할전환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을 어떤 각도에서 볼 것인가? 중미갈등·한미갈등·한중갈등·남북갈등·남남갈등 등을 최소화하고 국익과 민족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냉혹하고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 때문에 실제 외교라인을 맡고 있는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조차도 11월 2일 주한미군을 동북아 기동군으로 역할 전환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차원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반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주한미군의 기동군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첫 시사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주한미군의 기동군화가 중국을 자극, 결과적으로 동북아 불안정요인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¹ 이처럼 국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주제는 연구할 만한 충분한 가치

¹ 『조선일보』, 2004년 11월 3일.

를 가지고 있다. 본 글은 2003년 이후 본격화된 주한미군 재편성 혹은 지위조정에 대한 전반적 의미를 살핀 뒤, 이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전략을 살피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주한미군의 지위조정은 한·미 양 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주변국 가들의 핵심적 관심사인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또한 탈냉전 이후 미국의 세계전략 및 동아시아 전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동아시아 중심국가로서 ‘평화적으로 부상(和平崛起)하려는 중국이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²

문제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먼저 몇 가지 일련의 질문을 던지면서 논의를 시작해보자. 우선 부시 정부의 주한미군의 재편 혹은 재조정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으며, 왜 미국은 주한미군 재조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일까? 과연 중국은 미국 측의 주한미군의 재편을 어떤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일까? 현재 북핵 협상이 난항을 거듭함에 따라 북·미관계가 한층 더 위태로운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는 시점이다. 그러면 이러한 한반도의 급박한 상황변화에 대해 중국 측은 어떤 대응전략과 준비작업에 들어간 것일까? 주한미군 재조정을 계기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어떤 모종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 같은 일련의 문제제기와 의문들이 꼬리를 물고 제기된다. 본 글은 2003년부터 본격화된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지위조정에 대해 중국 측이 보이는 여러 가지 입장과 태도를 통해 그들의 인식과 대응전략을 우선적으로 살피고자 한다.³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미관계와 대중관계에서 한 쪽으로 편중되지 않으면서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조그마한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² 최근 중국의 평화적 부상(和平崛起)을 둘러싼 논쟁과 그 가능성 여부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Robert L. Suettinger, “The Rise and Descent of Peaceful Rise,” *China Leadership Monitor*, No. 12 (Fall 2004), pp. 1-10 <<http://www.chinaleadershipmonitor.org/20044/rs.pdf>> (검색일: 2004년 10월 24일); Bruce Klingner, “Peaceful Rising seeks to allay ‘China threat,’” *Asia Times*, March 12, 2004; Evan Medeiros, “China Debates Its ‘Peaceful rise’ Strategy,” *YaleGlobal Online*, June 22, 2004 <<http://yaleglobal.yale.edu/display.article?id=4118>> (검색일: 2004년 10월 3일); 孫哲, “結構性導航: 中國和平崛起的外交新方略,” 『世界經濟與政治』, 2003年第12期, pp. 1-8; 夏立平, “論中國和平崛起的重要戰略機遇期,” 『毛澤東鄧小平理論研究』, 2004年第1期, pp. 52-56; 陳先奎·辛向陽, “中國和平崛起是否可能,” 『學習時報』, 2004年8月30日; 徐堅, “和平崛起是中國的戰略抉擇,” 『國際問題研究』, 2004年第2期, pp. 1-8; 閻學通, “和平崛起與保障和平,” 『國際問題研究』, 2004年第3期, pp. 12-17; 국내 글로 한석희,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질서변화: 중국 4세대 지도부의 평화발전전략을 중심으로,” 『신아시아』, Vol. 11, No. 3 (2004), pp. 113-134 등이 있다.

³ 최근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역할전환에 대한 중국의 글들로, 全克林, “駐韓美軍調整及其影響,” 『現代國際關係』, 2003年第7期; 郭銳, “駐韓美軍整合的目的及前景芻議,” 『理論導刊』, 2003年第12期; 李華, “冷戰後駐韓美軍調整評述,” 『國際觀察』, 2004年第1期; 李華, “從威懾, 遏制到制衡—論駐韓美軍歷史角色的轉換,” 『學術探索』, 2004年第3期; 劉放明·郭銳, “駐韓美軍基地調整的多維影響,” 『東南亞縱橫』, 2004年第2期 등 참고.

II. 주한미군 재배치와 역할전환의 배경과 원인

1. 전지구적 차원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와 미국의 신안보 전략

미국의 주한미군 재편계획이 최근 들어 갑자기 시작된 것은 아니다. 탈냉전 시대에 접어들면서 미국은 전세계적 차원에서 해외주둔미군 재편에 관한 구상에 들어갔다. 특히 1991년 걸프전 이후 미국은 첨단 선진기술을 갖추고서 신속하게 문제지역으로 출동할 수 있는 고효율적 전략전술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즉 냉전 시기처럼 중후한 장비를 갖춘 대규모 부대를 세계 각지에 전진배치 시키면서 기동성이 떨어지는 부대는 더 이상 새로운 안보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보다 앞선 90년 4월에 에미 조지 부시 행정부는 이른바 「동아시아 전략구상」(East Asia Strategic Initiative: EASI)에서 휴전선 부근의 미군을 남하시킨다는 재배치 계획과 감축계획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계획안은 10년에 걸쳐 3단계로 나눠 추진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990년에서 1992년 사이에 주한미군은 3만6천 명 수준으로 감축되고 한국군의 부분적 자립화도 모색된다.⁴ 그러나 1993년 북핵위기로 말미암아 한반도 안보상황이 악화되자 이 남하 계획과 감축안 계획은 잠정 중단되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클린턴 정부는 1994년 7월에 발표한 「개입과 확대」(Engagement and Enlargement)라는 새로운 세계전략에 따라 대북전략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략을 재검토하기 시작했고, 이 전략은 클린턴 집권 말기까지 관철된다.⁵

그런데 2001년 9·11 테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냉전 이후 초강대국인 미국이 비대칭적인 군사적 공격을 받게 되면서 안보상의 취약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보수 강경세력들은 냉전시기의 군사편재는 국가안전을 확보하기에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새로운 안보전략을 내세우게 된다. 9·11 이후 미국의 안보전략의 전환은 크게 3가지 보고서에 집약적으로 나타났다. 즉 9·11 직후에 나온 미국의 소위 「4개년 방위보고서」(Quadrennial Defense Report: QDR로 줄임)⁶와 2002년 1월에 나온 「핵태세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NPR로 줄임)⁷ 그리고 2002년 9월에 나온 이른바 새로운 「국

⁴ 한·미 간의 안보관계 조정에 관해서는 김일영·조성렬, 『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서울: 한울, 2003), 제6장 및 심지연·김일영 편, 『한·미동맹 50년』(서울: 백산서당, 2004년) 참고.

⁵ 이 전략은 미국이 동북아 지역 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분쟁에도 대비하여 동시에 승전한다는 이른바 'win-win strategy'를 강조하고 있다.

⁶ QDR 원문, <<http://www.comw.org/qdr/qdr2001.pdf>> (검색일: 2002년 10월 23일).

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로 줄임)이 바로 그것이다. 이 세 가지 보고서는 미국의 안보 전략이 9·11 이전과 현격히 달라졌음을 보여 준다. 이 전략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평화와 안보의 유일한 첩경은 군사적 행동에 있다고 보는 ‘부시 독트린’, 즉 ‘기선제압식 선제공격론’(preemptive strike)에 있다. 이런 부시 독트린을 가장 효과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은 기동성·침단성·경량화·정보화·정밀성·고화력으로 집약되는 이른바 ‘림스펠드 독트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림스펠드는 군사분야혁신(RMA) 발상의 신봉자라고 볼 수 있다. 그는 9·11 테러 이후 미국이 불량국가나 테러집단들의 대량살상무기(WMD)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동성이 높은 신속 대응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러한 전략적 구상은 이미 부시 집권 초기의 「군 전환 연구보고서」에 잘 나타난 바 있다.⁸ 림스펠드 독트린이 가장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역시 이라크전일 것이다. 미국이 비록 걸프전(68만 명)의 40%인 30만 명 정도의 병력만 투입했음에도 단기간에 이라크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다름 아닌 ‘림스펠드 독트린’의 구체적 적용일 것이다.⁹

이제 이 같은 림스펠드 독트린이 이제 주한미군에도 적용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 한·미동맹의 현주소이자 딜레마인 것 같다. 미국이 북핵위기 속에서 주한미군 재편작업을 강행하는 배경에는 이라크전의 승리를 가져다 준 림스펠드 독트린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급기야 2003년 5월 중순 한·미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 뒤에 림스펠드 국방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점증하는 핵 위협으로 말미암아 주한미군 병력 중 일부를 철수하고 나머지는 기동성과 침단무기 능력을 제고하면서 휴전선에서 떨어진 지역으로 옮기겠다고 주장했다.¹⁰

이상에서 보듯 요컨대 주한미군의 재배치 계획의 배경은 1990년대 초 걸프전에서부터 그 발단을 찾을 수 있지만, 본 계획이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9·11 직후 형성된 미국의 새로운 안보전략의 전환에 있다고 하겠다. 특히 부시 독트린과 림스펠드 독트린의 결합으로 재배치 계획이 가속도를 낼 수 있었다.

⁷ NPR 원문, <<http://www.globalsecurity.org/wmd/library/policy/dod/npr.htm>> (검색일: 2002년 11월 11일).

⁸ Transformation Study Group, *Transformation Study Group: Transforming Military Operational Capabilities*, April 27, 2001; Donald H. Rumsfeld, “Transforming the Military,” *Foreign Affairs*, Vol. 81, No. 3 (May/June 2002); 강봉구, “아프간 전쟁 이후 미국의 군변혁: 변화된 전쟁양상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 42집 1호 (2002) 참고.

⁹ 김일영, “주한미군 재조정,” 『계간 사상』, 가을호 (2003), p. 234; 김일영, “주한미군재조정: 왜, 어디까지, 그리고 어디로,” 심지연·김일영 편, 『한·미동맹 50년』 (서울: 백산서당, 2004년), p. 174.

¹⁰ 『연합뉴스』, 2003년 5월 19일.

2. 한·미관계 차원에서 본 주한미군 재배치 배경과 원인

전반적으로 미국은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단지 전지구적 차원의 군사력 조정의 일부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과 한·미관계의 각도에서 보면, 최근 한국 내 한·미동맹의 표류 현상과 반미 민족주의 고양 및 반미감정 확산도 미군 재배치의 또 하나의 배경이자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한미군의 잦은 범죄와 주민피해는 물론이고 급기야 2002년 6월 여중생 2명이 미국 장갑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은 반미감정을 극대화시키는 주요한 분수령이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불평등한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에서 주한미군철수 요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반미 목소리가 비등하면서 한·미동맹은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들게 된다. 미국 역시 이러한 한국의 반미운동 확산에 주한미군감축과 재배치 추진이란 카드로 맞대응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한국 내 반미운동의 고조에 맞서 미국의 일부 학자는 이에 극단적으로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 중립국”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¹¹

흥미롭게도 한국의 김일영(2003)은 미국이 주한미군 재편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를 집권초기 대미 자주성을 주장했던 노무현 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¹² 미국이 미군 감축과 재배치 카드를 한국 내 보수적 여론을 활용해 노무현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유용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의 판단은 실효를 거두어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얻어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는 최소한 대미정책의 일관성이란 측면에서 보면 일정 정도 개혁세력으로부터 비판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김일영의 관점은 대체로 노무현 정부의 대미 자주적 태도가 한·미동맹 약화와 대미정책의 실패를 가져왔다고 보는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편 미국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는 조지타운대 교수인 한국계 재미학자 빅터 차(Victor Cha)는 미 정부의 입장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그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주한미군의 재배치 계획을 밝힌 이유와 배경은 직접적으로 2002년 두 여중생 사망 사건이후 확대된 반미시위에 대한 징벌적 대응 때문도 아니며, 또한 악의 축 국가 가운데 하나인 북한에 대한 예방전쟁을 준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며 바로 전지구적 차원의 미 군사력 재배치 계획의 일환일 뿐이라고 본다.¹³ 빅터 차의 관점에서 보듯 향

¹¹ W. Safire, “The Asia Front,” *New York Times*, March 10, 2003.

¹² 김일영, “주한미군 재조정,” pp. 229-232.

¹³ 全克林, “駐韓美軍調整及其影響,” p. 8. 미국 정부에 충실한 그의 입장이 제 2기 부시정부의 인정을 받아 최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국장에 내정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특히 그는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매파식 포용정책”(hawk engagement)을 주장해 주목을 받은

후 그가 넓게는 동북아 문제, 좁게는 북핵 문제 처리과정에서 어느 정도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실하게 대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고 미국의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처할 것으로 예측된다.

주한미군 재배치의 배경과 요인에 대한 이상의 분석과 달리 남창희는 국내적 요인, 즉 주한미군의 수도권 편중, 지역성장도시와의 충돌, 사유공유지 보상의 미비, 기지 분산성, 주민피해와 대민사고의 급증을 꼽았고, 국외적인 요인으로 냉전종식과 9·11 테러라는 안보 환경의 새로운 변화를 제기했다.¹⁴ 그의 이런 분석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요인은 전자보다 후자에 더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Ⅲ.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역할전환에 대한 중국의 인식

1. 주한미군의 재배치에 대한 중국의 기본인식

앞에서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를 전지구적 차원과 한·미관계 차원에서 그 배경과 원인을 살폈다면, 이제 중국측이 동아시아 지역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재배치 계획을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는지 그 기본인식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자.

전반적으로 미국은 주한미군의 재배치를 단지 전지구적 차원의 군사력 조정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은 주한미군 재배치 배경과 이유를 동아시아 지역적 차원에서 볼 때 미국의 입장과 전혀 다른 견지에서 본다. 즉 주한미군의 재배치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는 조치에 그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북한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임과 동시에 한걸음 더 나아가 미국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내 전략적 지위를 강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작용·규모·구조에 대한 재조정은 동북아 지역 및 아태지역의 동맹체제와 군사적 우위를 강화하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적극적으로 전진기지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본다. 또한 세계 각지의 분쟁지역에 미군을 이동시키는데 유리하도록 현재 미국이 한반

바 있다. <<http://news.joins.com/internatio/200411/18/200411181348188903400041004110.html>> (검색일: 2004년 11월 20일); Victor D. Cha and David C. Kang,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3); 이상현, “북핵위기와 대북전략: 봉쇄 VS. 포용,” 『국가전략』, 제10권 1호 (2004), pp. 200-202 참고.
¹⁴ 남창희,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의 배경과 한국의 대응방향,” 『국가전략』, 제10권 1호 (2004), pp. 7-35.

도 주변지역에 하나의 공중중심과 해상중심을 세우려고 계획 중이라고 파악한다.¹⁵ 또한 미국의 주한미군에 대한 조정 시기·내용·결심 및 추진속도의 측면에서 보면, 결국 전지구적 차원의 미군 재배치 전략보다 동아시아 지역적 차원의 재배치 문제가 중국에게 한층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사안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¹⁶ 요컨대 중국은 미국의 주한미군의 재배치 전략을 ‘후방 재배치를 통한 공격 전략’(以退爲進)으로 묘사하면서 그 목적은 미국이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관건적인 외부역량으로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 까지 군사적인 면에서나 정치적인 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데 있다고 본다.¹⁷

2. 주한미군의 ‘인계철선’(trip-wire)¹⁸ 역할 포기에 대한 한·중 인식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국가들은 남북한과 중국 그리고 일본일 것이다. 이 재배치 중에서도 가장 큰 주목을 끄는 문제는 역시 그동안 대북 전쟁역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온 미군의 ‘인계철선’ 역할을 포기하는 문제라 하겠다. 관계국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한 미 2사단이 한강 이남으로 후방배치 되면서 그동안 동부대가 수행해왔던 인계철선 기능을 포기하는 문제가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미 2사단이 북한군의 장사정포, 방사포의 보복공격의 사정거리 밖으로 옮김에 따라 미국은 미군피해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가운데 북한 핵시설을 선제공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주변국가들에서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미군이 향후 2006년까지 투자하기로 한 110억 달러 규모의 150개 분야에 걸친 전력증강 내용 중에는 이미 배치가 완료된 무인 정찰기 ‘프레데터’, 최신형 패트리엇(PAC-3) 증강 배치, 기존 AH-64 아파치 헬기(알파형)를 AH-64D 롱보우(베타형)로 업그레이드, Stryker 여단의 순환 배치, 고공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F/A18 호넷 전폭기 배치 등이 있다.¹⁹ 이렇게 첨단무기와 신속대응군 체제로 전력을 증강

¹⁵ 劉放明·郭銳, “駐韓美軍基地調整的多維影響,” p. 76.

¹⁶ 全克林, “駐韓美軍調整及其影響,” pp. 8-9.

¹⁷ 陳峰君·王傳劍, 『亞太大國與朝鮮半島』(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2), p. 116; 劉放明·郭銳, “駐韓美軍基地調整的多維影響,” p. 78.

¹⁸ 인계철선(引繫鐵線, trip-wire)이란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하는 부비트랩(설치용 폭약)의 폭발 장치를 뜻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지뢰, 수류탄, 클레이모어 등 폭발물과 연결돼 건드리면 자동으로 터지게 하는 철선(폭발장치)를 가리키는 군사용어이다. 이후 의미가 확장되어 군사적 이해관계가 큰 지역이나 침공예상지역에 동맹국 군대가 주둔하면서 무력충돌 시에 자동개입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군사적 방어수단의 일환으로서 적의 침공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다. 중국에서는 인빠오선(引爆線)이라고 한다.

¹⁹ 남창희,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의 배경과 한국의 대응방향,” p. 26; 이상현, “한·미동맹 50년의

시키는 것은 북한과 중국에게는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관련 주변국기들의 이런 우려에 대해 정작 미국 측은 전혀 다른 입장과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동아시아 차원에서 재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계철선 개념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인계철선 개념을 부인하고 있다.²⁰ 또한 미사일과 같은 첨단무기로 진행되는 현대전의 성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인계철선은 적합한 개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런 미국의 인계철선 역할의 포기과 미 2사단의 한강 이남으로의 후방배치에 대해 중국과 북한은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북핵문제에 강경 대응하기 위해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우려하고 있다.²¹ 중국 역시 주한미군 재배치가 자신들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²²

이 인계철선 역할의 포기에 대해 한국의 입장도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르다. 보수세력은 미국이 유사시 자동개입 역할을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는 반면, 진보진영은 미국의 대북선제공격 움직임과 관련시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²³

그러나 한국의 일부 학자는 미국이 대북선제공격을 시작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준비로서 미 2사단의 후방배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런 추론은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본다. 그 근거로 첫째, 미국은 현재 이라크 전후 처리에 군사력과 외교력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며, 둘째,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정밀공격은 효과도 불분명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대규모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셋째, 미국의 공습으로 핵 시설이 파괴되면 방사능이 일본까지 파급될 가능성도 있고, 넷째, 무엇보다도 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가 미국의 대북 기습공격에 기꺼이 찬성할 가능성은 아주 낮고, 다섯째, 서울 경기지역에 많은 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미 양국이 막대한 무역·투자 이익을 공유하고 있어서 미국이 대북공격이라는 극약처방을 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²⁴

또한 한국의 남창희(2003)는 주한미군이 인계철선 역할을 포기하고 후방으로 재배치하는 조치는 3가지의 부정적 효과와 2가지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다.²⁵ 우선 긍정적

성찰과 한·미관계의 미래,” 『국가전략』, 9권 1호 (2003), p. 58; 『조선일보』, 2004년 10월 7일.

²⁰ 에컨대 2003년 4월 리포트 (Leon J. LaPorte) 한·미연합사령관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인계철선은 미 2사단 장병에게 모욕적인 발언이며, 이미 파산한 개념이다”라고 밝혔다. 김일영, “주한미군 재조정,” p. 244에서 재인용.

²¹ 『한겨레신문』, 2003년 6월 9일

²² 『China Daily』, May 27, 2003.

²³ 김일영, “주한미군 재조정,” pp. 244-245.

²⁴ 남만권, “북핵문제 관련 군사적 조치의 적절성 검토,” 『주간국방논단』, 제 954호 (2003.8); 남창희,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의 배경과 한국의 대응방향,” pp. 26-27.

효과 두 가지는 첫째, 미 2사단의 재배치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효과로 작용해 북한의 타협적 태도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 점이고, 둘째는 미군과 한국주민과의 마찰 요인을 감소시켜 한·미동맹의 안정적 지지기반을 확대할 것으로 내다본다. 이런 긍정적 평가는 현재 대치국면과 문제상황을 분석하는 데 크게 설득력 있는 논변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긍정적 효과보다 더 중요하게 다가온다. 그 부정적 효과를 보면, 첫째, 바로 위에서 언급했지만 인계철선 역할의 포기에 따라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고 둘째, 제2사단의 후방배치에 따라 안보공백이 발생하므로 이를 보충하기 위해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첨단무기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국방비 증가요구(3년간 110억 달러구매압력) 압력에 놓인다. 특히 미사일 방어(MD)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이 방공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PAC-3 구매필요성이 대두되고, 결과적으로 한국이 김대중 정부 이래로 줄곧 MD 계획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이제 불가피하게 미 주도하의 MD 체계에 자연스럽게 동조할 수밖에 없게 된다. 셋째, 주한미군의 후방배치가 전세계 미군기지 재조정의 일환일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을 ‘지역안보동맹’으로 재정의하는 실질적인 준비작업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결국 한·미동맹이 미·일동맹으로 동조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것은 향후 미·중관계가 대만문제 등을 둘러싸고 충돌할 경우 주한미군의 역내 안보 역할은 한국이 원치 않는 미·중충돌의 코스에 휘말려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정재호 교수는 한국은 대만문제 혹은 그 밖의 다른 요인들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미·중 간의 충돌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던 바 있다.”²⁶

한편 중국 측은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인계철선 역할포기를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견지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입장과 태도를 살펴보자.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군재배치는 미군의 전략적 지위를 크게 개선할 것이지만 동시에 한반도 지역 내 현재화된 전략적 평형상태를 불가피하게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본다. 첫째로 미군의 이런 조정은 주한미군의 안전지수를 크게 높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마치 북한의 ‘인질’이다시피 묶여 대북·대남 전쟁역지 역할을 수행해오던 주한미군이 이제 북한의 사정거리 밖인 한강 이남으로 재배치됨으로써 유사시 북·미 간 군사적 충돌 때 미군의 피해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다.²⁷ 실제로 1993~1994년 제 1차 북핵위기 시 미국 국방부 측에서 북한 핵 시설에 대한 선별 타격을 고려했지만 북한의 보복

²⁵ 남창희,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의 배경과 한국의 대응방향,” pp. 27-28.

²⁶ Jae Ho Chung, “South Korea between Eagle and Dragon: Perceptual Ambivalence and Strategic Dilemma,” *Asian Survey* 41, No. 5 (September~October 2001), p. 795.

²⁷ 李華, “冷戰后駐韓美軍調整評述,” p. 60.

공격 때문에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때문에 미군 재배치와 인계철선 역할의 포기는 최소한 이런 북한의 직접적인 보복 공격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런 미군의 재배치와 인계철선 역할 포기를 우려하는 한국 측을 안심시키려는 의도에서, 미국 국방부 관리는 일단 전쟁이 발생하면 북한이 우선 노동 미사일을 한강 이남 미군기지를 향해 발사할 것이지만 미국의 전역미사일방어체계(TMD)가 원활이 작동하여 노후한 북한 미사일을 타격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미군에 대한 위협정도는 과거에 비하면 아주 낮다고 주장하기도 했다.²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 재배치와 인계철선 역할 포기는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에게도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미군 재배치는 한국을 TMD 체계에 동조시켜 중국을 겨냥하는 전초기지 건설 준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정 이후의 미군은 북한에 대해 한층 더 강력한 군사적 위협과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미국의 대북 기선제압용 선제공격(先發制人)의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²⁹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이 미국의 선제공격을 피하기 위해서도 미국이 제안한 다자회담 틀 속으로 나와 협상을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³⁰

최근 제2기 부시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북한이 한층 더 적극적으로 6자 회담에 나서려고 애쓰는 것도 이런 일련의 위기의식의 발로라 하겠다.³¹

3. 주한미군의 역할전환에 대한 중국의 우려

주한미군 재배치와 감축 그리고 역할전환 이 3가지의 관계는 무엇이며, 특히 주한미군의 역할전환에 대한 중국 측의 우려는 어느 정도일까?

우선 미군재배치와 감축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이 관계에 대해 미국의 입장은, 미 국방정보국(DIA)의 아리고니(G. Arrigoni) 동아시아 담당 국장이 2003년 6월 12일 “한·미관계협의회” 창립총회에서 한 발언에서, 그리고 6월 26일 학술회의에서 주한 미 8군 사령관 캠퐸(Charles Campbell)이 배포한 기초연설문의 내용에서 일부 확인된다. 두 사람 모두 주한미군의 재배치는 필연적으로 미군의 감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았다.³²

그런데 중국에게 있어 주한미군의 양적인 감축보다 더 본질적이고 관건적인 문제는 주

²⁸ 全克林, “駐韓美軍調整及其影響,” p. 9.

²⁹ 劉放明·郭銳, “駐韓美軍基地調整的多維影響,” pp. 76-77.

³⁰ 全克林, “駐韓美軍調整及其影響,” p. 10.

³¹ 『조선일보』, 2004년 11월 22일.

³² 『조선일보』, 2003년 6월 13일, 『중앙일보』, 2003년 6월 27일.

한미군 재배치와 역할전환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주한미군의 감군을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첨단무기구입과 신속기동여단(Stryker Brigade Combat Team: 이하 SBCT³³) 신설방향으로 나가면서 질적으로 한층 더 강력한 주한미군건설을 시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 반증으로써 2003년 5월 31일 주한미군 사령부는 주한미군전력증강계획을 발표했다는데, 주요골자는 향후 3년간 110억 달러를 투입하여 최첨단 정예부대로 전환할 것이니 이에 한국정부가 상응하는 국방비 증액으로 전력증강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었다.³⁴ 이러한 주한미군의 SBCT로의 전환은 한마디로 이른바 ‘한국판 린스펠드 독트린’의 등장이자 구현이다. 이것은 또한 미 지상군의 일부를 ‘신속전개군’(Rapid Development Force: RDF)으로 재편하는 것이기도 하다.³⁵ 이렇게 주한미군은 규모가 축소되지만 대신 기동성과 파괴력을 갖춘 신속전개군으로 재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측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지형적 특성 때문에 첨단무기를 이용한 주한미군의 대북 공격이 이라크 전쟁 때처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미군의 신속전개군으로의 재편과 전환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있다.³⁶ 이것은 주한미군이 한층 더 공격적인 부대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보다 한층 더 중요한 문제는 주한미군의 역할조정이라 할 수 있다. 2003년 가을 「한·미동맹 미래정책구상협의 5차회의」에서 기존의 국지방어형 동맹이었던 한·미동맹을 이제 지역동맹으로 주한미군의 성격 역시 한반도 방위군에서 지역 방위군(지역군: regional forces)으로 50년 만에 그 성격이 크게 바뀐다고 발표했으며, 2003년 11월 중순에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의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의미하는 문구를 삽입했다. 이것은 유사시 한반도 주변 분쟁에 주한미군이 신속기동군으로 출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한미군의 역할이 기존의 대북역지에서 동아시아 기동대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³⁷ 이것은 동북아 특히 한중관계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치명적인 장

³³ Stryker는 1945년 전사한 스투어트 스트라이커 일병과 1967년 전사한 로버트 스트라이커 상병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다. SBCT는 3,600여명의 병력과 309대의 경장갑차량, M198 155mm 곡사포 12문, TOW 대전차 미사일 등의 장비를 갖추며, 보병 3개, 포병 1개 대대 외에 정보·정찰·기갑·공병·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대대 각 1개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일영, “주한미군 재조정,” pp. 240-241.

³⁴ 『조선일보』, 2003년 6월 4일.

³⁵ Edward F. Bruner, “Army Transformation and Modernization: Overview and Issues for Congress,” CRS Report for Congress, April 4, 2001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library/report/crs/RS20787.pdf>>; 이정훈, “미 2사단, 중국 팽창 견제하는 군단급 파워,” 『신동아』, 2003년 6월호, pp. 300-305; 김일영, “주한미군 재조정,” p. 239.

³⁶ 郭銳, “駐韓美軍整合의目的及前景芻議,” p. 64.

³⁷ “주한미군, 동북아 기동대로,” 『중앙일보』, 2003년 10월 10일.

애를 초래할 만한 우려할 사항이 아닐 수 없다.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반응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동북아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이번의 주한미군 조정을 이 지역을 둘러싼 대국 상호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주한미군 지위조정의 단기적 주요목표가 설령 한반도에 있다고 하지만, 그 장기적인 목표는 동북아 전역에 있다고 본다. 이 방안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한반도의 안보에 책임을 지는 동시에 그 작용 범위를 확대하며 이제 주한미군기지는 대외 군사기지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주한·미군의 활동반경이 이제 대만 일대로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한·미연합사령관인 러포트(Leon J. LaPorte)는 2003년 11월 4일 “주한미군의 작용은 단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전 동북아 지역으로까지 미친다. 주한미군은 이제 미래의 수요에 근거하여 자신의 역량을 재고할 것이다”고 주장했다.³⁸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주한미군의 역할전환이 갖는 실질적인 효과는 주한미군이 전략적으로 후퇴하는 외양을 띠긴 하지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요, 명목상 병력의 감소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군사력 증강이요, 한국 내 군사임무의 대대적인 감소는 주한미군으로 하여금 한국 이외의 지역도 방위업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중국은 이 같은 주한미군의 성격전환을 동북아 지역의 현재 안보질서를 철저히 파괴하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대국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아울러 동 지역 내 대국 간 모순과 분쟁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군비경쟁을 촉발시켜 미래 동아시아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해칠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³⁹

IV.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역할전환에 대한 중국의 대응전략

미국의 주한미군 재배치와 역할전환에 대한 중국의 대응전략문제는 기본적으로 중·미 간의 안보문제로 집약된다고 볼 수 있다. 미·중 양국 간의 안보인식의 차이를 먼저 간단히 살핀 후에 중국의 대응전략을 논구해보자.

1990년대 이래로 미국 내에 ‘중국위협론’(China threat)이 상당한 지지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 내에서도 ‘미국 위협론’이 존재한다.⁴⁰ 1990년대 이후로만 보더라도 양국 관

³⁸ 李華, “冷戰后駐韓美軍調整評述,” p. 60.

³⁹ 李華, “冷戰后駐韓美軍調整評述,” pp. 60-61.

⁴⁰ 여기서 중국위협론은 주로 협의의 ‘경제적, 군사적 위협론’을 지칭한다. 중국위협론에 대한 세계

계는 갈등과 충돌이 병존해왔다. 동북아 지역 안보환경의 변화를 둘러싼 양국 간의 인식차 이도 현저하다. 가령 중국의 대표적인 안보 전문가인 탕스핑(唐世平)과 같은 학자는 설령 중국의 경제성장이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에게 어느 정도 조정을 불가피하게 할지 모르나 지역 안보환경을 악화시킨다고 보지 않는다. 최소한 중국의 부상으로 말미암아 안보환경이 악화된다고 보지 않는 것이다. 그는 동아시아지역 안보환경에 불안정 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주요 원인은 중국의 부상이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 안보환경의 불안정성,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구축 및 미·일 안보동맹이라고 본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태도이자 미국정책에 대한 이 지역국가들의 태도라고 본다. 이 점이 동아시아 안보환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대체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크게 3가지 관점으로 집약될 수 있다. 첫 번째 관점은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경쟁국가(a peer competitor)로 발돋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국은 자신의 동맹체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중국의 주변지역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면서 중국의 도전을 꺾는데 있으며,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중국의 도전을 격퇴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 관점은 중국이 미국의 주도권과 패권적 지위에 도전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중국을 포용(접촉)하는 정책을 취할 뿐만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체제 내에 중국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정책에 기반하고 있다. 세 번째 관점은 미국이 동맹체제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자간 안보·경제기구·조약 등을 통해 지역국가들을 그의 체제 속으로 진입하도록 하면서 이들 국가들이 비록 중국을 적대시하지 않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들을 미국의 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정책에 기초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온건파 인사들은 두 번째와 세 번째 관점을 상대적으로 중시한다면, 대중국 강경파 인사들은 첫 번째 관점에 치우쳐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내 때파세력인 Blue Team이나 NeoCon 세력들이 대체로 첫 번째 관점에 치우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중국의 통일이나 심지어 중국의 경제성장 조차

주요 국가들의 인식을 다룬 글로, Herbert Yee & Ian Storey (ed.), *The China Threat: Perceptions, Myths and Reality* (New York: Routledge Curzon, 2002) 참고할 만하다. 중국위협론과 관련하여 한편으로 '중국위협론'에 찬성하는 대표적인 글로는 Nicholas Kristof, "The Rise of China," *Foreign Affairs*, Vol. 72, No. 6 (November/December 1993), pp. 59-74; Richard Bernstein & Ross H. Munro, *The Conflict with China* (New York: Alfred A. Knopf, 1997); Condoleezza Rice, "Campaign 2000: Promoting the national interest," *Foreign Affairs*, Vol. 79, No. 1 (January/February 2000), pp. 45-62; <<http://www.defenselink.mil/news/Jul2002/d20020712china.pdf>>; 다른 한편으로 중국위협론에 반대하는 글로는 Robert S. Ross & Andrew J. Nathan, *The Great Wall and the Empty Fortress: China's Search for Security* (New York: W. W. Norton, 1997); Robert S. Ross, "Beijing as Conservative Power," *Foreign Affairs*, Vol. 76, No. 2 (March/April 1997), pp. 33-44; 金鑫, 『中國問題報告』(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1), pp. 59-69 등이 있다.

도 미국의 국가이익에 심대한 위협을 낳을 수 있다고 본다. 이들 ‘공격적 현실주의자’(Offensive Realist)들은 강대한 중국이 필연적으로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넘볼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미국은 반드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중국이 계속 강대해지고 중국에 통일되는 것을 막아야한다는 관점에 경도되어 있다.⁴¹

이러한 미·중 양국 간의 인식의 격차는 신 부시 정부가 집권하면서 한층 더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미 앞에서 논의한 바 있지만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부시 독트린과 럽스펠드 독트린이 주도하는 공격적 현실주의는 약화되기는커녕 한층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9·11 테러 이후 반테러주의 전선에서 미·중 간에 일정정도 협력이 유지되긴 했지만, 미·중 간의 심각한 안보불안 요인들, 즉 ‘대만문제’, ‘동아시아 지역 내 MD 시스템 도입’, ‘북핵문제의 미해결’, ‘미·일동맹 강화’ 등 일련의 갈등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건설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계속 유지되리라 전망하는 것은 속단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설상가상으로 2003년 봄 이후부터 전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역할전환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안보불안요인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이 문제를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현상적 측면에서 보면 비록 대북공세전략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대중봉쇄 및 견제전략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있다.⁴²

그럼 이 같은 안보인식을 바탕으로 중국은 어떤 대응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구사할 것인지 살펴보자.

1. ‘신안보관’에 기초한 ‘방어적 현실주의’(defensive realism) 선택

신 부시정권이 집권한 이래로 ‘공격적 현실주의’에 기초한 미국의 군사지상주의에 맞서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의 폭은 대단히 협소해 질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일초다강’(一超多强)의 세계질서 속에서 미국의 일방주의와 패권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적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미국 중심의 공격적 현실주의에 맞설 수 있는 대안이념으로 구상해 놓은 개념이 바로 ‘신안보 이념’에 기초한 신안보관(新安全觀)이다.⁴³ 이 관

⁴¹ Shiping Tang, “The Rise of China as a security linchpin,” *Asia Times*, June 21, 2003 <<http://www.iapscass.cn/XueshuCG/showcontent.asp?id=230>> (검색일: 2004년 3월 30일); 唐世平, “中國的崛起與地區安全,” 『當代亞太』, 2003年 第3期, p. 17.

⁴² 劉放明·郭銳, “駐韓美軍基地調整的多維影響.”

⁴³ 신안보관(New Security Concept)은 이미 1997년 중·러 연합성명에서 제기된 바 있고, 1999년 3월 26일 전 장쩌민 총서기가 제네바 군축회의에서도 제기되어 이후, 21세기 중국의 새로운 안

점은 미국 주도하의 서방 안보관이 주로 실력과 상호불신에 기초한 동맹전략·균형전략·핵위협전략·상호확증파괴전략·기선제압식 선제공격 전략 등으로 나타난다고 비판한다. 이런 ‘공격적 현실주의’ 안보관은 그 목적이 국가의 안전을 보호 하는 데 있기보다 오히려 지역쟁탈과 전세계적 패권쟁취에 있다고 혹평하면서 중국의 신안보관은 이런 구식의 안보관에서 탈피하여 반패권주의·상호신뢰·상호이익·평등협력의 가치를 내건다고 강조한다. 이런 중국의 신안보관에 기초해서 보면, 미국의 주한미군 재편과 역할전환은 다분히 구 안보관에 근거한 공격적 현실주의의 성격을 띠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 딜레마는 어느 국가도 미국을 견제할 수 없고 세력균형이 상실된 현 국제관계 속에서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과 경쟁할 수 없는 중국의 선택은 불가피하게 ‘방어적 현실주의’로 기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⁴⁴ 따라서 중국은 미국과 직접적으로 경쟁하거나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기보다 오히려 우회적으로 온건하고 자기제약적이며 안보협력을 중시하는 ‘방어적 현실주의’ 정책을 취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대응일 것이다.⁴⁵ 중국의 전통적인 대외정책인 ‘평화공존 5항원칙’은 ‘방어적 현실주의’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이 전략은 다분히 패권주의를 지향하는 초강대국을 제외한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밖에 없다. 중국이 대미관계에서 경제적 차원이 아니라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경쟁을 공개적으로 가속화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런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은 최소한 이 영역에서 만큼은 이른바 ‘타오팡양휘이(韬光養晦)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⁴⁶ ‘타오팡양휘이’와 ‘방어적 현실주의’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보관으로서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된다. 『人民日報』, 1997年 4月 24日; 江澤民, “推動裁軍進程維護國際安全: 在日內瓦裁軍談判會議上的講話,” 『人民日報』, 1999年 3月 27日; 沈驥如, “世界需要新的安全理念,” 『前線』, 2003年 第3期 <http://www.iwep.org.cn/html/shijexuyaoxdaqln_shenjiru.htm> (검색일: 2004년 4월 3일).

⁴⁴ 2003년 5월 22일 미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는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객관적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주목할 만한 내용은 바로 중국이 국방의 현대화에 전념하고 있으나 여전히 군사기술과 능력에 있어서는 중국이 미국보다 최소 20년 뒤쳐져있다고 평가했다. Harold Brown, Joseph W. Prueher & Adam Segal, Chinese Military Power <http://www.cfr.org/pdf/China_TF.pdf> (검색일: 2003년 6월 20일). 중국의 추수룡(楚樹龍)도 향후 20년 사이에 중국은 선진군사기술을 보유한 미국·일본과 비교했을 때, 그 군사기술·무기장비 수준면에서 총체적인 격차를 좁히기 힘들 것이고 심지어 한층 더 확대될 지도 모른다는 비판적인 전망을 하기도 했다. 楚樹龍, “全面建設小康時期的中國外交戰略,” 『世界經濟與政治』, 2003年 第8期.

⁴⁵ 중국의 ‘방어적 현실주의’에 대한 상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Shiping Tang and Peter Hay Gries, “China’s Security Strategy: From Offensive to Defensive Realism and Beyond,” EAI Working Paper No. 97, October 2002, East Asian Institut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唐世平, “理解中國的安全戰略,” 『國際政治研究』, 2002年 第3期를 참고.

⁴⁶ ‘타오팡양휘이(Bide our time, build our capacities)는 재능(능력)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 굴욕을 참고 자신의 실력을 숨기면서 때를 기다리는 일종의 ‘와신상담’식 은폐 전략

이 전략은 공세적인 의미보다 평화와 발전의 의미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제2차 북핵위기를 계기로 미국이 2003년도부터 동북아 지역 내에서 군사적 위협의 강도를 높임에 따라 이런 전략적 태도는 한층 더 중요하게 다가온다. 따라서 필자가 보기에 2003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중국은 대외 외교전략에서도 어느 정도 불가피한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보여 진다.

2. 대외 외교전략의 수정

- ‘평화적 부상론’(和平崛起)에서 ‘평화발전론’(和平發展)으로의 전환 -

주지하다시피 개혁개방 이래로 중국의 종합국력(comprehensive national strength)은 엄청난 발전을 거듭했다.⁴⁷ 종합국력 가운데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는 경제력을 무역총량 면에서 보면 이미 2004년 8월에 세계 3위권으로 진입해 일본을 추월했으며,⁴⁸ 군사력을 방

혹은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모호전략’(strategic ambiguity)이기도 하다. 89년 천안문 사태 직후 덩샤오핑이 제시한 ‘28자 방침’, 즉 冷靜觀察, 穩住陣脚, 沉着應付, 韜光養晦, 善于守拙, 決不當頭, 有所作爲에서 나왔다. 이 개념과 그 전략적 함의에 대해서는 외교학원의 취성(曲星) 교수는 여전히 타오팡양휘가 전략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반면, 북경대 국제관계학원의 예즈청(葉自成) 교수는 중국이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1980년대의 수세적인 ‘타오팡양휘’ 전략을 탈피하여 자신감과 책임감 있는 적극적인 ‘有所作爲’, ‘대국외교’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본 필자는 전력상의 현저한 격차 때문에 이 ‘타오팡양휘’ 전략이 최소한 중·미 안보관계에서는 21세기에도 상당기간동안 지속될 것으로 본다. 『鄧小平文選』, 第3卷, pp. 321, 363; 자오찬성(趙全勝), 김태완 역, 『중국의 외교정책』 (서울: 오름출판사, 2001), p. 96; 曲星, “堅持 韜光養晦 有所作爲 的外交戰略,” 『中國外交』, 2002年 1月; 葉自成, “中國實行大國外交戰略勢在必行-關於中國外交戰略的幾點思考,” 『世界經濟與政治』, 2000年 1期; 葉自成, “中國的大國外交戰略,” 漢城 西江大學 演講, 2004年 1月 12日; 葉自成, 『中國大戰略: 中國成爲世界大國的主要問題與戰略選擇』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 제2장 참고.

⁴⁷ 중국의 종합국력은 크게 4개의 하부체계로 나뉘 분석할 수 있다. ①물적 혹은 경성국력(자연자원, 경제력, 과학기술, 국방), ②정신적 혹은 연성국력(정치, 외교, 문화, 교육), ③조정력(조직화된 지도력, 통제, 관리, 국가발전의 조정), ④환경적(국제적, 자연적, 국내적) 힘 등이다. 미 국방부, “중국국방보고서 2000” <<http://www.defenselink.mil/news/Jun2000/china06222000.htm>> (검색일: 2002년 10월 30일); 중국 내 종합국력 관련 문헌으로, 黃碩風, 『綜合國力新論』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9) 참고.

⁴⁸ 2004년 11월 2일자 『日本經濟新聞』에 따르면, 중국의 무역액이 2004년 말에 1조1천억 달러를 기록해 1조 달러 정도가 될 일본을 누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보도했다. 그리하여 중국이 확실히 세계의 공장으로 발돋움했다고 일본인들은 무서움을 금치 못했다. “중국무역규모 일본 누르고 세계 3위,” 『한국경제신문』, 2004년 11월 2일; 『日本經濟新聞』, 2004년 11월 2일; 그리고 중국의 경제력 정도를 명목환율로 비교해보면, 2004년 중국의 GDP 규모는 1조4,46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나, 구매력평가(PPP) 환율에 따르면 중국의 2004년 GDP는 2004년 7조 4,500억 달러에 달해 이미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경제이다. EIU viewswire, “China: 5-year forecast” (2004.8.16), 지만수, “한중 경제교류 12년의 회고와 전망,” 2004년 12월 2일 한국정치학회 발표문 참고.

위비의 실질적 지출 면에서 보면 이미 세계 2위권에 진입한 상태이다.⁴⁹

이런 중국의 종합국력의 신장을 바탕으로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중국 국내에서는 19세기 중엽 이래 과거 오욕의 근대사를 뒤로하고, 중화제국의 부흥의 때가 왔다고 판단해 국제사회에 ‘책임 지는 대국’(負責任的大國) 부상론이 제기된 바 있다.⁵⁰ 이어 2003년에는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평화부상론’(和平崛起論 Peaceful rise)을 제기하였다가, 2004년에는 이 ‘평화부상론’에서 ‘평화발전론’(和平與發展論 Peace and Development)으로 후퇴하고 있다.

2004년을 전후로 하여 중국의 국제적 지위와 역할 그리고 책임을 둘러싼 대외정책 상의 전략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 단초는 당내 씽크 탱크 그룹의 핵심적 인물로서 전 중앙당교 상무부교장이자 현재 중국 ‘중국개혁개방포럼’(China Reform Forum: 中國改革開放論壇)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정베젠(鄭必堅)이 2003년 11월 3일 중국 海南省 의 ‘보아오’(博鳌)포럼에서 처음으로 이른바 ‘평화부상론’(평화흥기론)을 제기하면서부터이다. 이 평화부상론의 이념은 중국이 국제사회에 “책임감있고 평화적이며 비위협적인” 방식으로 대국으로 부상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선포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이론이 제기되자마자 국제사회에 뿐만 아니라 중국 국내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⁵¹ 윈자이바오 총리 역시 2003년 12월 10일 방미 시 하버드 대학 강연에서 동 이론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으며, 후진타오 총서기 역시 동년 12월 26일 마오쩌둥 탄신 110주년 기념 강연에서 동 이론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그리하여 후진타오-윈자이바오 신 지도부의 새로운 외교전략의 일환으로서 국내 외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다. 윈자이바오 총리는 일정정도 모호한 동 이론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5가지 핵심적 내용으로 이 이론의 특징을 집약하기도 했다. “첫째, 이 이론은 세계평화를 활용하여 중국의 발전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중국의 발전을 통해 세계의 평화를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둘째, 평화부상은 중국 자신의 힘과 독자적인 노력에 기반 해서 달성된다. 셋째, 개방정책의 지속과 활발한 국제경제교류가 없이는 평화부상은

⁴⁹ 중국 정부가 2002년 국방비(204억 달러)로 공식적으로 발표한(中國國防白書 2002) 수치와 다르게,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2002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중국의 방위비가 무려 650억 불에 달해 세계 제 2위 군사대국으로 부상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군사력보고서」(2002) <<http://www.defenselink.mil/news/Jul2002/d20020712china.pdf>>.

⁵⁰ 葉自成, “中國實行大國外交戰略勢在必行-關於中國外交戰略的幾點思考”; 葉自成, 『中國大戰略: 中國成爲世界大國的主要問題與戰略選擇』.

⁵¹ 원문은 鄭必堅, “中國和平崛起新道路和亞洲的未來,” 博鳌亞洲論壇演講, 2003年 11月 3日 <<http://www.crf.org.cn/peacefulrise/zhengbijian.htm>> (검색일: 2004년 8월 30일), 영문은 Zheng Bijian, “China’s Peaceful Rise and Opportunities for the Asia-Pacific Region,” *China Strategy*, Vol. 3, July 20, 2004 <<http://www.csis.org/isp/csn/040720.pdf>> (검색일: 2004년 10월 3일) 참고.

달성될 수 없다. 넷째, 평화부상은 몇 세대에 걸친 많은 시간을 요구한다. 다섯째, 중국의 평화부상은 다른 어떤 나라를 방해하거나 위협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다른 어떤 나라의 희생을 대가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⁵²

그러나 이처럼 신지도부가 대외정책의 신기조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장쩌민 전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과 쑹칭훙(曾慶紅) 국가부주석을 비롯한 당 최고지도부의 빈대에 직면했으며 학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표출된다.⁵³ 일부 서구학자들은 이런 이견의 표출을 당내 지도부의 주도권 다툼의 일환으로 소개하기도 하지만,⁵⁴ 필자가 보기에 보다 중요한 원인은 동 이론이 미칠 대외적 파장을 의식한데서 야기되었다고 파악된다. 그리하여 2004년 4월 이후 당 최고지도부는 동 이론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했으며, 다만 학계 내에서 통용은 인정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아울러 동 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다시 중국의 전통적인 대외정책이념인 ‘평화와 발전’(和平與發展 이하 ‘평화발전론’으로 줄임)으로 회귀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대외전략인 ‘평화부상론’의 부침을 보면 중국이 현 시기와 국제정세를 보는 다양한 시각이 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시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나눠 살펴보면, 첫째, 대내적 각도에서 보면, 중국이 평화부상론을 견지할 경우 가령 파룬공 사건처럼 국내 정치사회적 불안정이나 친서구식 민주화 운동 등이 발발했을 때,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근거와 명분을 상실하게 된다는 자기모순, 즉 위기관리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들의 시각에서 보면 중국의 평화적 부상을 지금 거론한다는 것은 현재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이 개념은 중국의 특수한 국내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시기상조라고 본다.⁵⁵ 둘째, 양안관계의 각도에서 보면, 평화부상론이 대만독립을 억제할 수 있는 기존의 ‘무력사용불가피론’을 견지할 수 없게 만드는 자기모순적 내용과 비밀관성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만약 중국이 평화부상론으로 일관할 경우, 대만이 독립을

⁵² <http://english.people.com.cn/200403/15/eng20040315_137493.shtml>.

⁵³ 평화부상론을 신지도부의 새로운 전략으로 소개하는 글로, 孫哲, “結構性導航: 中國和平崛起的外交新方略”; 夏立平, “論中國和平崛起的重要戰略機遇期”; 徐堅, “和平崛起是中國的戰略抉擇”; 閻學通, “和平崛起與保障和平”; 龐中英, “和平崛起 關鍵在和平,” 『南方周末』, 2004년 3월 25일 등을 들 수 있고, 반면 이 이론에 대해 이견을 표시한 글로 王逸舟, “中國的和平崛起還沒有完成” <<http://sis.ruc.edu.cn/news/shownews.asp?newsid=143>> (검색일: 2004년 10월 30일); 陳先奎·辛向陽, “中國和平崛起是否可能,” 『學習時報』, 2004년 8월 30일 등이 있다.

⁵⁴ Robert L. Suettinger, *op. cit.*, p. 7; Joseph Kahn, “Former Leader Is still a Power in China’s Life,” *New York Times*, July 16, 2004.

⁵⁵ 王逸舟, “中國的和平崛起還沒有完成” <<http://sis.ruc.edu.cn/news/shownews.asp?newsid=143>> (검색일: 2004년 11월 10일).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역으로 중국은 무력수단을 통한 독립역지 역할을 하기 힘들게 된다는 자기모순에 빠진다. 따라서 중국은 대만이 독립을 추구하거나 또는 미국으로 대표되는 외국세력들이 중국의 통일을 방해할 경우 중국이 평화부상론을 견지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⁵⁶

셋째, 국외 대외적 견지, 특히 주변국기들의 ‘중국위협론’적 시각에서 보면, 중국최고지도부 내에서 중국의 경제적·정치적·군사적 팽창을 위한 이상적인 대전략으로서 이 평화부상론을 사용하고 있다는 주변국기들과 특히 미국의 의혹이 증폭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평화부상론에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들은 특히 ‘부상’ 개념의 사용을 반대한다. 즉 이들은 평화적 부상을 통한 중국주도하의 ‘세력전이’(power transition)는 아시아 지역 내 새로운 권력중심의 출현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변국기들과 특히 미국의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진단한다.⁵⁷ 따라서 중국위협론을 불식시켜야 하는 중국이 도리어 새로운 대외정책을 표방함으로써 역내 위협을 조장하고 군비경쟁을 초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중국이 공식적으로 ‘평화부상론’을 접고 기존의 ‘평화발전론’ 전략으로 회귀하게 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이 일방적으로 동아시아지역 내 주한미군 재배치와 역할 재조정을 통해 역내 안보위협을 강화하고 있다는 중국의 판단에 비추어보면, 현재 중국의 평화부상론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력강화의 국제적 명분을 부여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부상’보다는 ‘평화와 발전’의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킴으로써 미국의 전력증강명분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잠재적 충돌을 피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요컨대 필자의 판단에 따르면, 2004년에 접어들면서 중국이 갑자기 대외정책을 ‘평화부상론’에서 ‘평화발전론’으로 회귀하게 된 주요 배경이자 주요 계기 중의 하나는 바로 미국이 주한미군 재배치와 역할전환을 통해 동북아 지역 내 대북·대중 안보위협을 강화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일정정도 연유되었다는 점이다.

⁵⁶ 陳先奎·辛向陽, “中國和平崛起是否可能”; 時殷弘, “中國和平崛起的若干根本條件和重要平台,” 『教學與研究』, 2004年 第4期.

⁵⁷ Evan Medeiros, “China Debates Its ‘Peaceful Rise’ Strategy.”

3. 6자 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현재 중국정부가 동북아 위기 현안들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문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다. 북핵위기로 말미암아 북·미 간의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자동개입'할 수 밖에 없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북·미 간에 충돌을 막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핵 문제를 처리하도록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 공식적인 관방의 입장이 아니긴 하지만,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난항을 거듭하게 되자 2003년부터 중국 내 스인홍(時殷弘)과 선지루(沈驥如)와 같은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중국과 북한의 중·조우호동맹조약의 파기 가능성, 즉 북한에서 전쟁 발발 시 중국이 개입치 않겠다는 주장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주지하다시피 1961년 북중 간에 체결한 「북·중 우호협작상호원조조약」(中朝友好合作互助條約) 가운데 군사동맹성격을 지닌 조항 2조는 쌍방간에 어느 한쪽이 침략을 받게 되면 한쪽은 즉각 군사원조를 해야 한다는 자동개입내용이 명기되어 있다.⁵⁸ 선지루는 조약파기의 이유로 첫째, 중국은 '신안보개념'(new concept of security)에 따라 '군사동맹'을 포기했고, 둘째,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이미 표명했으며, 셋째, 핵문제로 북미 간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대북 지원 군대 파견은 무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⁵⁹ 그러나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런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현재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중국은 대북 압박용 카드의 일환으로 이런 입장을 흘리고 있지 않나 관측된다. 만약 중국이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레버리지를 잃게 되고, 극단적으로 최악의 북·미간의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에, 중국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자국 실리주의로 호를 가능성을 미리 비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이종석도 중국은 조약이 규정한대로 유사시 '전력을 다해 지체없이' 북한을 지원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 이유는 첫째, 전쟁에 개입할 경우 중국의 사회적인 경제성장프로그램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며, 둘째, 한반도 전쟁은 중국측으로 하여금 막대한 대가를 치루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⁶⁰ 실제 중국의 분석에 따르면, 만약 북·미 간에 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이 입게 되는 손실은 가히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나다. 가령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중국이 한국·일본·미국과의 무역액인 2500억 달러(중국 GDP의 20% 정도) 이상 되는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다. 한국·일본·미국이 중국에 투자한 수백 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액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또

⁵⁸ 『中華人民共和國條約集 第10集』(北京: 法律出版社, 1962年版), p. 26; 이종석, 『북한-중국 관계 1945~2000』(서울: 중심출판사, 2000), p. 319.

⁵⁹ 沈驥如, “維護東北亞安全的當務之急-制止朝核問題上的危險博奕,” 『世界經濟與政治』, 2003年 第9期.

⁶⁰ 박건영·이종석 외, 『한반도 평화보고서』(서울: 한울, 2002), p. 102.

한 한중경제 역시 엄청난 재난을 입게 되고, 전쟁의 여파는 중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과 아세안, 중국 내지와 대만 홍콩의 경제무역 관계에 까지 연쇄적 재난을 가져올 것이다. 아태 지역의 경제적 혼란과 재난을 가져온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중화민족의 부흥대업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둘째,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보면, 중국으로의 북한 난민 유입으로 중국에 엄청난 경제적 부담과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셋째, 한반도 주변국가 들인 한국·중국·일본·러시아 지역에도 국가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밖에 없다.⁶¹ 따라서 중국입장에서는 최대한 북·미 간의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간의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양자 간 당사자 해결 원칙을 고수해왔다. 1999년에 주룽지 총리는 “북한은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이 유도미사일이나 핵무기 개발에 대해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고, 장쩌민 전 주석 역시 2002년까지만 해도 중국의 기존 입장, 즉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며 북핵문제의 해결은 양자 쌍방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리고 William J. Perry와 David Lampton에 따르면, 장쩌민 주석은 북·미 간의 긴장 관계 형성의 주요원인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 쪽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문제 해결도 당사자 양자 간에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왔다고 고백한 바 있다.⁶² 그러나 2003년 1월 북한이 NPT를 탈퇴하자마자 장쩌민 주석은 미 부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중국이 처음으로 북한의 NPT 탈퇴를 지지하지 않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후진타오 주석이 집권하고 나서 북한을 압박하는 여러 정책들을 취하기 시작했다. 첫째, 양빈을 체포한 점이다. 둘째, 기술상의 이유를 핑계로 북한에 대한 오일 공급을 일시 중단한 점이다. 셋째, 미국의 보도에 따른 것이지만 중국 내 주중북한대사관 관리를 비난했다는 점이다. 넷째, 북·중 국경선 부근에 있던 무장경찰을 인민해방군으로 교체한 점이다. 이러한 중국의 대북 태도는 전례 없는 강경한 조치로서 대북 문제에 보다 깊이 개입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되었다. 이리하여 중국은 2003년을 기점으로 북·미관계의 방관자에서 중개자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태도로 전환했다.⁶³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 회담을 적극적으로 주도해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중국의 적극적 개입은 결국 북·미 간의 충돌을 막아 보겠다는 의지의 소산이기도 하지만 동북아 지역 내 자신의 영향

⁶¹ 沈驥如, “維護東北亞安全的當務之急-制止朝核問題上的危險博弈.”

⁶² Zhu Feng, “China’s Policy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China Strategy*, Vol. 3, July 20, 2004 <<http://www.csis.org/isp/csn/040720.pdf>> (검색일: 2004년 10월 3일) 참고.

⁶³ *Ibid.*

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겠다는 입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중국의 대북 정책 혹은 대한반도 정책은 크게 4가지로 집약된다. 즉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북한의 체제유지와 경제회복,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가 바로 그것이다.⁶⁴

아울러 중국은 북핵위기의 평화적 해결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한반도 정책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 6자회담을 국제적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다자간 안보협의기구’로 제도화시키고자 하고 있다.⁶⁵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에 적극적으로 강경대처 하겠다는 정책의 일환이기도 한 주한미군 재배치와 지위조정에 대해 중국은 북한 못지않게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6자 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동북아 안보상황의 악화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시급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재편과 역할조정에 대한 대응조치이기도 하다.

4. 국방현대화의 적극적 추진과 중·러관계 강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은 대응전략이라 할 수 있는 ‘방어적 현실주의’ 견지, ‘평화발전론’으로의 전환과 같은 일련의 조치들을 강구해왔다. 이런 정책들은 다분히 대외공개적이고 선전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조치 그 자체가 중국의 국방현대화 사업의 약화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오히려 비공개적이고 은밀한 방법으로 국방현대화를 추진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⁶⁶ 실제로 중국은 주한미군의 재편과 동아시아 지역군으로의 위상전환을 중국적으로 중국군체와 중국병세의 의미가 강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평화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현실주의에 기초한 국방현대화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선제공격론’으로 전환하면서 마침내 이라크마저 침공했다. 이어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으로 전역을 확장하면서 대만에 최첨단무기를 팔고 있을 뿐만 아

⁶⁴ David Shambaugh,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Playing for the Long Term,” *The Washington Quarterly* (Spring 2003), pp. 43-56; 문흥호, “호금도 체제의 대내외 과제와 전망,” 『한국과 국제정치』, 제20권 1호, 통권 44호 (2004년 봄), pp. 107-109.

⁶⁵ 중국측은 상하이협력기구(SCO)와 같은 다자간 안보협의기구처럼 6자회담을 동북아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간 안보대화기구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沈驥如, “維護東北亞安全的當務之急-制止朝核問題上的危險博奕,” p. 7; 『解放軍報』, 2003년 12월 25일.

⁶⁶ 방위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것에도 이를 유추할 수 있다. 김재관, “중국의 대국화 신안보전략: 미·중 간의 안보외교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19권 1호 (2003), pp. 14-15; Richard Bernstein and Ross H. Munro, “Coming conflict with America,” *Foreign Affairs*, Vol. 76, No. 2 (March/April 1997), pp. 18-31.

나라 또한 일본과의 방위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으며, 심지어 인도·파키스탄 및 필리핀과도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시도는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포위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미국과 비교해 볼 때, 군사력이 절대적 열세에 놓인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주한미군 재배치와 역할조정은 중국으로 하여금 국방 현대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이제 국방현대화는 경제발전과 동시에 실현할 국가목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와 안보의 ‘동시강화론’ 혹은 ‘균형발전론’이 최근에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⁶⁷ 중국은 안보적 차원의 4가지 주요 위기요인인 미국의 MD시스템 구축, 일본의 재무장, 대만의 무장력 강화와 독립화 추세 및 북한의 핵개발 추진 때문에 한층 더 국방의 현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중국이 이라크 전의 교훈을 바탕으로 인민해방군에 대한 대대적인 군 현대화·정예화·첨단화·신속화·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해·공군의 경우 지휘체계 면에서 큰 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육군의 경우 정보화·기계화 부대와 신속대응부대·공중타격부대·육상상륙부대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⁶⁸ 이런 중국의 국방현대화 사업은 주한미군의 동북아 지역군의 위상전환과 대만의 독립화 기도를 제어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다.

미·중 간의 최대갈등의 요인은 대만문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이 중국, 몽골, 대만은 각기 다른 나라로 대만인들이 말하는 본국은 대만을 지칭할 뿐이며, 중국은 적국(敵國)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는 동시에 이어 국민, 토지, 정부, 군대를 갖고 있는 대만은 주권독립 국가라면서 2008년 헌법 대개정을 통해 대만에 맞는 헌법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⁶⁹ 이런 대만의 적극적인 독립화 추구는 양안관계의 긴장을 낳을 뿐만 아니라 향후 미·중관계의 충돌로 이어지는 연쇄작용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대대적인 국방현대화를 통해 독립기도를 막으려는 것은 당연하다. 즉 2008년 북경 올림픽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대만독립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때문에 동북아 지역에 가장 안보상황이 불안정할 시기는 2008년을 전후로 한 시기가 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군사력 증강은 자동적으로 타국에 대한 위협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존과 안전을 구하는 국가라면 타국의 국방력 증강에 대해 곧바로 자국의 국방력 증강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때문에 미국이 주한미군 재편과 역할재조정 에 따라 동북아 지역에 구축하려고 하는 MD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

⁶⁷ 김재관, “중국의 대국화 신안보전략: 미·중 간의 안보외교를 중심으로,” pp. 11-13.

⁶⁸ 『文匯報』, 2003년 8월 9일; 『鳳凰網』, 2003년 8월 8일.

⁶⁹ 『중앙일보』, 2004년 11월 8일.

해 중국이 국방현대화를 서두르는 것은 ‘안보딜레마’에 따른 자연스런 반응이기도 하다. 결국 중국의 확증적 안보는 미국의 대중국 MD 구축과 1차 공격에 대해 ‘제2차 반격능력’을 갖추는 데 보장될 수 있으므로 전략핵무기의 증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⁷⁰ 즉 ‘유한적 핵위협’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대미 강경론자인 중국의 장루이장(張睿壯)은 구체적으로 ‘제2차 반격능력’을 갖추기 위해, 첫째, ICBM의 수량을 늘릴 뿐만 아니라 이를 분산배치·은폐하며 이동식 발사기를 보강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적의 1차 공격으로부터 전략무기들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둘째, ICBM, SLBM 그리고 제4세대 장거리 전략폭격기가 삼위일체가 된 첨단 투척 시스템을 구축할 것, 셋째, ‘복수개별유도탄두’(MIRVs)를 응용개발하여 최단시간 내에 핵대국에 대한 제2차 반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⁷¹

그러나 이러한 대미 공세적 대응보다는 보다 실리주의적 각도에서 ‘방어적 현실주의’에 기초한 온건 대응론이 중국 지도부 내에 더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인민대학의 스인홍(時殷弘) 교수는 대미 대칭적 전략, 즉 미국의 공격에 대한 중국의 제2차 반격능력을 갖추는 것에 반대한다. 그는 미국의 MD에 대한 중국의 대칭적 전략은 증장기적으로 양국 간의 긴장과 충돌을 초래해 중국의 안전과 발전에 불리하다고 보며, 오히려 미국이 MD를 추진한다 할지라도 중국은 외국의 ‘핵소국’ 혹은 잠재적인 핵보유 국가들에 대해 확증적인 잠재 핵위협능력과 핵보복능력을 갖추는 것이 더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중국은 중·미 간의 정치·군사 영역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국가대전략이라든가 정책결정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스인홍의 관점은 다분히 중·미 양국 간의 안정적 발전을 기초로 한 실리주의·실용주의적 대응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⁷²

대체로 ‘방어적 현실주의’에 기초한 후자의 입장(온건대응론)이 외관상 공식적인 대외정책으로 선전되는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공세적 현실주의’에 기초한 전자의 입장(강경대응론) 역시 무시할 수 없으며 은밀하게 비공개적으로 국방현대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자는 병행 추진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⁷⁰ 김재관, “미국의 미사일 방어정책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전략,” 『국가전략』, 10권 1호 (2004), pp. 57-58.

⁷¹ 張睿壯, “沉着應對與自廢武功-就如何應對對美國國家導彈防禦計劃同時殷弘先生商榷,” 『世界經濟與政治』, 2002年 第1期; 김재관, “미국의 미사일 방어정책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전략,” p. 62.

⁷² 時殷弘, “美國國家導彈防禦計劃與中國的對策,” 『太平洋學報』, 2000年 第4期; 時殷弘, “沉着應對NMD,” 『環球時報』, 2001年 4月 4日; 時殷弘, “中國的外部困難和新領導集體面對的挑戰,” 『戰略與管理』, 2003年 第3期 등 참고.

한편, 중국은 미국의 주한미군 재배치와 역할전환 뿐만 아니라 미·일동맹의 강화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최근 중국측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9년 만에 '방위계획대강'을 개정하면서 처음으로 북한과 중국을 안보위협요인이라고 명시했다. 방위대강의 주요내용과 목적은 무기수출 완화조치를 통해 미 주도의 MD체제 구축에 적극 동참하면서 미·일 군사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는데 있다.⁷³ 이러한 미·일 군사동맹 강화와 주한미군의 재편 및 역할전환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가 2005년에 사상 처음으로 중국 영토 안에서 중·러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⁷⁴ 전략적인 협력 파트너인 양국은 이 밖에도 대만독립 저지, 반테러전쟁에서도 공조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은 주한미군의 전력증강과 미·일동맹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이자 견제수단으로서 러시아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IV. 결 론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제2기 부시정권이 들어섰다. 대체로 한국민들은 내심 부시의 재당선을 열렬한 환호보다 차분하게 다소 근심 섞인 우려감 속에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희구하는 일반 한국민들의 염원과 정반대로 부시 정부는 '공격적 현실주의'에 기초해 동북아 현안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시도해왔기 때문이다. 북핵문제로 북·미관계가 제2라운드 힘겨루기 국면에 들어갔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묘연한 상황에서 강성 부시 정부의 연장은 남한보다 북한 당국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미 양자 간의 극단적인 대립이나 충돌을 누구보다 크게 우려했던 중국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협상을 초기의 양자 간 당사자 해결원칙에서 급선화하여 다자간 협의의 틀, 즉 6자 회담을 통해 평화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중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보다 2003년 이후 동북아 지역 특히 한반도 안보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상황판단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인다. 특히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역할재조정은 중국에게 심각한 안보위기를 가중시켰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위상 재조정은 직접적으로 대북공세전략

⁷³ 『조선일보』, 2004년 12월 11일.

⁷⁴ 『중앙일보』, 2004년 12월 15일; 미국의 MD 정책에 대한 대응전략의 일환인 중·러 간의 반-MD 공동대응강화에 대해서는 김재관, “미국의 미사일 방어정책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전략,” pp. 65-67 참고.

차원에서 나온 정책이긴 하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21세기 강력한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이 일련의 대응전략을 내놓고 있다.

첫째,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방주의에 대한 대안전략의 성격을 지닌 ‘신안보관’에 기초해서 이른바 ‘방어적 현실주의’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 전략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기존의 ‘타오핑양휘이’ 전략을 견지하면서 대국으로 성장한 국제적 지위에 맞게 일정정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이른바 ‘유소작위(有所作為)’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대외전략의 수정이다.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지위조정에 따라 미군의 전력과 미·일동맹이 증강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2003년 말부터 글로벌 대국으로 부상하겠다는 이른바 ‘평화부상론’을 대외에 천명한 것은 도리어 미국에게 국방력 증강의 명분을 부여한 셈이다. 따라서 미국의 전력증강을 완화 또는 조정할 수 있는 나름의 대안으로 ‘평화발전론’이란 외교노선으로 수정 복귀하게 만들었다. 셋째,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다. 최근 동북아 지역 내 가장 큰 안보불안요인은 북핵문제이다. 이 문제를 새로운 다자간 안보협상 틀인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은 북핵문제로 야기된 미군재편과 지위전환에 보다 능동적으로 위기완화 역할을 하기 위해 6자회담에 발 벗고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넷째, 위와 같은 3가지 대응전략이 대체로 수세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한다면, 국방현대화의 적극적 추진과 중·리관계의 강화는 주한미군의 재편과 지위전환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이라 하겠다. 미군의 재편으로 동북아 위기가 제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가장 확실한 안전보장은 힘의 확보일 것이다. 때문에 중국은 대외적으로 평화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도 내부적으로 비공개적인 방식으로 국방현대화에 진력하고 있다. 더구나 대만의 독립화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서도 국방현대화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국방현대화는 역으로 미국을 정점으로 한 일본·한국·대만의 역내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이다. 더구나 이들 국가들이 미국 주도의 MD체제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안보불안감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 다시금 국방현대화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이른바 악순환적 ‘안보딜레마’에 빠져있다.

그동안 중국이 미국에 대해 이른바 ‘선택적 협력’을 뜻하는 ‘치우통춘이(求同存异)’ 정책을 취했다면, 미국 역시 중국에 대해 ‘봉쇄(Containment)’와 ‘포용(Engagement)’ 정책을 병행시킨 이른바 Congagement 정책을 취해왔다. 우리 역시 주한미군 재배치와 역할전환이란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여 이제 중국과 미국에 대한 비대칭적인 관계로부터 협력적이고 자주적 태도가 요청된다. 성숙한 한·미동맹과 건설적인 한·중 동반자관계의 기초 위에서 ‘치우통춘이’적 자세로 대미·대중 정책을 펼쳐야 할 때이다. 특히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에 전심전력하고 있는 중국과의 협력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때이다. 우리는 향후 예상되는 중·미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느 정도로 상대적 독자성을 견지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 방법을 찾을 것인가에 외교적 역량과 자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